

요 즘 TV연속극 「雪中梅」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世祖의 政權篡奪 과정과 그 후의 爲政스타일을 그린 부분이 膾炙되는 모양이다.

「雪中梅」가 世人的 관심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세상은 順理로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적 規範을 재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을 보는 經綸, 인생에 있어서의 成熟度, 리더쉽, 어느 면에서도 端宗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世祖는 王權을 스스로 장악한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포부에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그 시대의 권력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사회는 그의 政權承繼 과정을 납득하지 못한다. 世祖는 선비들의 지지가 없으면 統治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革命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그의 비전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비사회의 저항은 의외로 완고하다. 피비린내나는 肅淸과 무력통치가 뒤따른다. 결국 世祖는 그의 在位기간의 거의 전부를 正統性کم플렉스 해소에 소비하게 된다.

李朝시대는 淵源부터 正統性에 취약점을 갖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王朝는 거의 偏執的이라고 할 만큼 正統性کم플렉스 극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몸부림은 이조시대 전체를 특징짓는 가장 두드러진 시대정신의 하나로 확산되고 그것이 형식과 명분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性理學에 대한 집착으로 表出되었다. 性理學이 그 발상지인 中國에서조차 퇴조하고 있을 무렵, 이땅에서는 장례절차라든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피의 쟁투가 권력엘리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歸結이었을 지도 모른다.

실질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밖에 없는 事案을 놓고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일을 그르친 예는 그 후에도 수없이 반복된다.

저 먼 옛날 5백년 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국적 명분론으로 오늘의 석유정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

우리나라의 원유정책은 비축의 강화, 장기계약물량의 유지, 중등원유 의존도의 감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각이 두드

韓國的 名分論

俞石在

러진다.

실제로 이러한 원유정책은 지난 4년간 안정성의 측면에서 刮目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8년까지는 국내 소요원유를 전량 메이저를 통해 들어왔으나 80년에는 산유국과의 직거래 비중이 45.4%나 되었고 작년에는 67%로 높아졌다. 스파트시장 이용률도 20%나 되어 메이저를 통한 원유도입은 13.4%에 불과하게 되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의 점유율은 67.5%로 낮아진 반면 동남아시아 등 非中東지역의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7.3%로 높아졌다. 원유비축 강화도 好調의 스타트를 보였다. 일정수준 이상의 스파트원유 도입에는 페닐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경제성을 중시하는 측에서 反論이 제기되었다.

...국제수지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원유정책은 경제의 흐름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원유정책도 경제의 프레임워크 내부로 끌어 들여 그 한 구성요소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

두가지 명분론이 부딪치자 안정위주의 원유정책은 비틀거리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과 안정성의 논쟁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兩者를 대립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경제성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불안요소는 감수하여야 한다는 名分論的 思考의 二元化 傾向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이 결여된 경제성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성을 무시하고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오는 안정이 있을 수 있을까.

× × ×

비축강화와 스파트시장이용률 제한은 이미 그 정책기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本 欄에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안정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精油會社별로 균등히 중동의존도를 60%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금년

도의 중동원유비율이 67.5%이므로 나라 전체로는 7.5%만 더 낮추면 되나 社別로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존도 균등화는 국가전체의 효용도는 만족시킬지 몰라도 개별기업의 효용도에는 상처를 입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은 개별기업의 효용도와 국가전체의 효용도를 다같이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가장 비경제적인 중동원유부터 비중동원유로 대체되도록 다변화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유인책을 써야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중동의존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중동의존도 (%)	원유구입 단가 (\$)	물 량 (B/D)
A 社	60	30	25만
B 社	70	28	20만
C 社	100	26	5만
전 체	68		50만

비중동원유의 가격을 편의상 배럴당 31달러라고 보고 정부의 균등화정책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원유구입비로 연간 5,840만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 B社: 20만B/D × 10% × 3 \$ = 2,190만\$/년

● C社: 5만B/D × 40% × 5 \$ = 3,650만\$/년

이는 국가전체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했는지 몰라도 개별회사의 경제성과 경제전체의 효율성은 완전히 무시된 결과를 빚게 된다.

만약 社別均等化정책을 포기하고 다변화 장려금을 1.01달러로 인상한다면 비중동원유의 실질구입비가 29.99달러가 되므로 A社는 즉각적으로 비중동원유로 소요물량의 일부를 대체할 것이다. 국가전체의 중동의존도를 60%로 유지하는 선으로 전환물량이 조정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연간 1,460만달러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또한 B社·C社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며 A社의 수익성을 높이므로 앞의 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원유시장이 안정적 국면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試案을 실천에 옮겨볼 絶好의 기회가 아닐까.